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
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7인)

1.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6)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부서검토: 가족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책길 73 (원평동)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가족관계개선 사업
3.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지원 사업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 사업

6.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종전의 다른 조례인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생략)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

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7.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④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가족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사업 등(안 제1조~제3조, 제5조) ○ 휴관일 및 이용시간(안 제6조) ○ 운영위원회 및 위탁운영(안 제7조, 제8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안 제9조, 제10조) ○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설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의 혼란 최소화, 조례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p>□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시설의 통합된 명칭 사용 및 단일 조례로 통합 개정에 따라 시민 혼란의 최소화, 행정 및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됨 ○ 소요예산 :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기술적 추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향후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기술적인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이성민(☎054-480-6552)